

불수능 여파로 정시 포기... 올해 수능, 재수생 몰릴 듯

서울대 등 주요대 경쟁률 하락
안정 지원보다 재도전 심리 작용
올해 현행 교육과정 마지막 수능
재수생 강세에 재학생 더 치열



지난달 2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9학년도 정시모집 대비 대입상담박람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어렵게 출제된 수능이 올해 고3이 될 수험생들의 대입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대 정시모집 경쟁률이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을 비롯해 상위권 주요 대학들의 정시 경쟁률 하락으로 재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6일 각 대학과 입시업체에 따르면 2019학년도 정시 모집 경쟁률이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했다. 대학 정시모집은 수능 점수 위주로 선발하므로 변별력이 주요 변수가 된다. 일반적으로 수능이 쉽게 출제됐다면 동점자가 더 많이 발생하고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지지만, 어렵게 출제되면 안정·하향 지원자가 증가한다.

특히 올해 고3이 될 학생들이 치르는 2020학년도 대입이 현행 2009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치르는 마지막 수능으로, 재수를 선택한 수험생들의 마지막 도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수능에서는 보통 재학생보다는 재수생 강세를 보임에 따라 재학생들의 대입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 정시 경쟁률 일제히 하락

지난 3일까지 각 대학별로 마감한 2019학년도 정시모집 지원현황을 보면, 서울대 3.58대 1(이하 전년 경쟁률 4.36대 1), 연세대 5.01대 1(5.33대 1), 고려대 4.39대 1(5.36대 1), 서강대 5.98대 1(6.86대 1), 성균관대 5.16대 1(5.72대 1) 등 주요 5개 대학 경쟁률이 일제히 하락했다.

모집인원과 경쟁률이 동반 하락한 대

학은 건국대(7.62대 1), 서울시립대(4.83대 1), 중앙대(10.24대 1), 한국외대(5.85대 1) 등이다. 서울지역 15개 대학 중 경쟁률이 상승한 대학은 경희대(6.12대 1 ← 5.92대 1), 숙명여대(4.41대 1 ← 4.32대 1) 두 곳으로 모집인원이 감소한 영향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진학사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서울 소재 15개 대학 경쟁률이 6.03대 1로 전년도 6.67대 1에서 크게 하락했다"며 "어려웠던 수능의 영향으로 평소보다 성적이 낮게 나온 학생들이 안정지원을 하기보다 지원을 아예 포기하고 재도

전을 하려는 심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각 대학별 모집군별 또는 일부 학과의 경우 대학 평균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대는 자유전공학부가 1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건국대는 다군 일반전형 경쟁률이 15.16대 1로 전년보다 소폭 올랐다. 다군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은 무려 34.3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경희대 한의예(인문, 8.78대 1), 우주과학과(9.43대 1), 고려대 수학교육과(12.50대 1), 동국대 국제학부(9.00대 1), 서강대 생명과학(7.82대 1), 서울시립대 철학과(8.9대 1), 성균관대 건축학(5년제, 15대 1), 숙명여대 통계(인문, 23.20대 1)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을 기록했다.

최근 교사 임용 감소를 반영하듯 국내 10개 고대 경쟁률이 1.9대 1로 전년 2.67대 1에서 큰 폭으로 하락해 2002학년도 대입 이후 처음으로 2대 1 미만의 경쟁률을 보였다. 의학계열에서는 치의대(11개교, 6.27대 1 ← 6.02대 1)를 제외하고 의대(37개교, 6.18대 1 ← 6.96대 1)와 한의대(12개교, 9.37대 1 ← 9.67대 1) 경쟁률이 소폭 하락했다.

◆ 2020 대입서, 재수생 강세 전망

이처럼 2019학년도 상위권 대학을 위

주로 하향·안정지원 추세가 나타남에 따라, 올해 고3이 대입을 치르는 2020학년도 대입에 재수생 지원자가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2020학년도 수능도 올해 기초처럼 변별력을 갖춘 어려운 수능 기조가 유지될 경우 재학생보다는 재수생 강세가 예상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8학년도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대평가인 국어, 수학기형, 수학년형에서 졸업생들의 표준점수 평균이 월등히 높았고, 1·2등급 비율 역시 모든 영역에서 졸업생이 높았다. 상대평가인 영어의 경우는 등급만 표기되지만 재수생 성적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0학년도 대입은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마지막 수능으로, 이듬해인 2021학년도 대입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수능이 출제된다. 따라서 올해 재수를 선택한 수험생들은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 마지막 수능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가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을 확정함에 따라 대학별 수능 위주 정시모집 전형 선발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30% 이상으로 권고된다는 점도 재수생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직장인 57%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

잡코리아 1594명 찬반 설문조사
30대 이상 상당수 ‘주요 지불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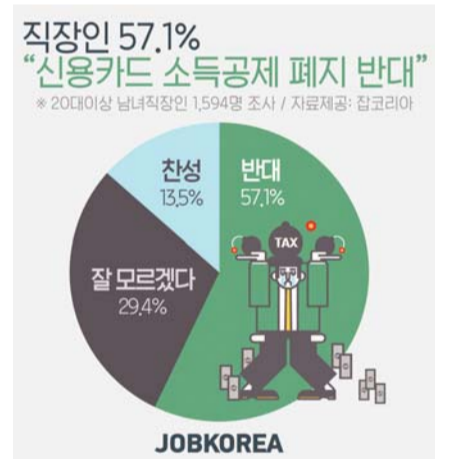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주요 공제 항목 중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가 올해까지 1년 연장된 가운데, 직장인 57%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잡코리아가 최근 남녀직장인 1594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과 평소 주요 지불수단’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7.1%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직장인은 13.5%에 그쳤고, 29.4%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반대하는 직장인은 특히 40대 이상(69.6%), 30대(64.9%)에서 높게 나타났다.

20대 직장인 중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가 43.3%로 가장 많았고, ‘반대한다’(40.7%)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30대 이상 직장인 상당수가 평소 지불수단으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용수 기자

상명대 이공계 고교생 진로특강

상명대학교(총장 백웅기)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지대, 서울여대와 함께 ‘이공계 진학을 위한 이공계 인재 진로진학 특강’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제62차 전문의자격시험 삼육대서 오늘부터 실시

삼육대(총장 김성익)는 제62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시험(필기)이 오는 7일과 11일 두 그룹으로 나뉘어 교내에서 치러진다고 6일 밝혔다.

2차 시험(실기 및 구술)은 61차, 62차 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해야 응시할 수 있으며, 1월 16일~25일까지 학회별로 진행된다.

/한용수 기자

같은 잠수함에 복무하는父子 최초 탄생

같은 잠수함에 근무하는 부자(父子) 승조원이 최초로 탄생했다. 그동안 잠수함 사령부에 같이 근무한 경우는 있었다.

해군은 6일 214급 잠수함 흥범도함(SS-II·1800톤)에 부자 승조원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아버지 정상봉 준위(49)가 근무하는 흥범도함에 아들 정한민 하사(24)가 배치된 것이다.

지난해 2월 해군 부사관 254기로 임관한 아들 정 하사는 1년 간의 수상함 복무를 거쳐 잠수함 승조원에 지원했다. 그는 지난 4일 6개월여의 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아버지가 근무 중인 흥범도함의 추진기관사(추기사)로 보직됐다.

잠수함에서 마지막 근무를 한 달여 정도 남겨둔 아버지 정 준위와 정 하사가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짧지만, 의미가 크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잠수함의 기관을 담당하는 분대장과 분대원으로 근무하게 됐기 때문이다.

정 준위는 잠수함 역사의 산증인으로, 1996년 잠수함 기본과정을 수료한 이후



214급 잠수함 흥범도함 기관실에서 아버지 보수관 정상봉 준위(왼쪽)가 아들 추기사 정한민 하사(오른쪽)에게 20여 년간의 잠수함 생활로 쌓여진 업무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다. /해군

20여 년 동안 잠수함부대에서 근무했다. 그는 손원일함에 근무하던 시절 잠수함 인수요원으로 214급 잠수함 운용의 초석을 닦았다. 당시 아버지를 따라 독일 잠수함 제작사가 있는 킬(Kiel) 인근에서 자란 정 하사도 잠수함 승조원의 꿈을 가지게 됐다고 한다. 정 준위는 짧지만, 아들과 함께 근무하는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알려 줄 예정이다.

/문형철 기자 captinn@

2018년은 한반도 대전환의 해였다.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남북한 군사 긴장 완화, 문화·스포츠 행사는 민간 교류와 자본 진출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사법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교류를 기대할 수 없다.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메트로에는 독자와 함께 법으로 북한을 읽으며 남북 교류 시대를 준비하려 한다. 첫 주제는 북한의 변호사 제도다.

(편집자주)

개인보단 ‘쑤인민의 권리’ 찾는 변호사

법으로 보는 북한

북한의 변호사 제도

‘변호사 사무실’ 하면 떠오르는 모습은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즐비한 개인 사무실과 로펌이다. 의뢰인과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 법정에서 그를 위해 변론하고 수임료를 받는다.

반면 북한에선 변호사가 재판소(법원)로 출근한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의 ‘2018 북한인권백서’ 발간에 참여한 한명섭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변호사가 개인사업인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국가여서 반 공무원 성격”이라며 “변호사 사무실도 재판소 내에 있다”고 말했다.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고, 조선변호사회가 사건을 배당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민사의 경우 이혼 말고는 사건이 별로 없는데, (노동당이) 복지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급적 가정을 깨지 않으려 한다’며 “변호사가 ‘소장 잘 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뒷돈을 받고 변론하면, 그것이 거의 유일한 일반 변호 활동”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시·군 인민재판소별로 설치된 사무소에는 변호사 1~2명이 배치된다. 사무실은 보통 인민재판소 건물 안에 있다.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북한



변호사 제도는 사회주의 법률 속 개인의 권리를 여실히 보여준다. 서울변회 보고서를 보면, 처음엔 북한 변호사도 일제 강점기 때처럼 개인이 보수를 받고 변론했다. 그러나 1947년 2월 7일 ‘변호사에 대한 규정’으로 공민의 전체 이익 보호와 사회주의 준법성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됐다.

이처럼 개인의 권리보다 ‘전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다보니, 북한 변호사는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지 못한다. 북한 헌법 제164조와 형사소송법 제58조는 재판과정에서 피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만, 실제로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다.

대한변협의 ‘2018 북한인권백서’를 보면, 탈북자 50명 중 재판 경험이 있는 사람은 17명이었다. 이 가운데 변호사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한 경우는 3명(17.6%)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2명은 본인인, 1명은 재판소가 변호인을 선정했다고 답했다.

/이범홍 기자 jaker@